

사회적 포용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¹⁾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

우선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글에서는 사회적 포용의 실태를 진단하고 포용의 차원들이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포용은 개인의 포용 상태(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와 포용의 구조적 과정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 법 집행의 평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포용 상태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제 포용 상태는 노동과 건강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소득 지원에 머물기보다는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포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 중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통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회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 이전 '과정'에서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양극화 및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삶의 질 등 사회의 질적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1) 이 원고는 김문길 등(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Ⅵ)』의 제3장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2016~17년 5.9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7점(0-10점)보다 낮다. 이는 OECD 36개국 중 3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OECD, 2019). 양적 성장에 주력한 데 따른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 서문에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성장과 고학력에 숙련된 국민들에 힘입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향후 수년간 좀 더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OECD, 2013).

OECD는 사회통합을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위해 작동하고 배제와 소외에 대해 싸우며, 소속감을 만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OECD, 2011). 다시 말해,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라는 세 축을 사회통합의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이동의 구축과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제의 측면이 심각하다면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와 시민참여 수준이 높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 내에서의 지위이동 또는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질적 측면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로서의 사회적 포용의 상태

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포용 상태를 포용 차원의 중첩도와 연관성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적 포용의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적 포용의 영역 간 연관성은 어떠한지, 사회적 포용이 낮은 집단이 누구인지, 그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사회적 포용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포용의 개념 및 측정 지표

사회적 포용은 여전히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그 핵심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포용은 그 자체로 개념 규정되기보다는 사회적 배제를 통해 개념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캐머런(Cameron)은 사회적 포용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문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이며, 사회적 포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정의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Cameron, 2006).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도 사회적 포용의 개념과 측정 지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지표의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197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사회적 배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관심이 높아졌다. 실업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던 2000년에는 리스본 유럽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상황이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을 저해한다고 인식함에 따라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공동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빈곤 개념이 외연적으로 확장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포괄한다는 점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정의 속에 저소득 및 물질적 박탈의 상태, 복지제도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정치적 참여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배제의 과정이 경제·정치·사회의 중심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열등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구조적 과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어슨(Pierson)은 사회적 배제란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개인, 가족, 집단, 이웃으로부터 박탈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빈곤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 낮은 교육 수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에서도 기인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의 대다수는 사회제도 및 서비스, 사회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기회가 박탈된다고 보고 있다(Pierson, 2002).

사회적 배제의 측정은 거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거나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상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측정은 거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고용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의 취업 여부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 개인의 사회적 배제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에 주목하여 선행연구의 측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이나 재산 등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중요한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Gordon et al., 2000; Barnes et al., 2002; Bradshaw et al., 2000;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둘째, 소득과 개인 웰빙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을 또 하나의 사회적 배제 차원으로 보고 있다. 고용은 소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한 자아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측면으로서 중요성이 높다 하겠다(Gordon et al., 2000; Burchardt et al., 1999;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셋째, 불건강 상태 또는 의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를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Barnes et al., 2002;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이때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즉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 넷째, 주거 상태도 사회적 배제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Barnes et al., 2002;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주거 영역의 배제는 건강 등 사회적 배제의 다른 영역들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하성규, 서종녀, 2006;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원재웅, 이재수, 2017). 다섯째, 서비스 배제도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포

표 1. 사회적 배제의 정의

저자	정의
Estivill(2003)	경제, 정치, 사회의 중심으로부터의 연속적인 파열로 인한 복합적인 과정의 누적은 점차적으로 개인, 집단, 지역 사회를 권력과 자원, 지배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열등한 지위를 갖게 함.
Fraser(2003)	사회적 배제는 일종의 불의(injustice)이지만 항상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은 아님. 반대로 그 개념은 사회 불의의 두 가지 차원, 나쁜 분배와 인식의 부족이라는 교차점에 있음. 두 가지 차원의 정의는 그 해답 또한 이차원적이어야 함을 의미함.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재분배 정책과 인식 관련 정책이 결합되어야 함. 그 두 가지 정책은 각각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음.
ESRC(2004)	개인과 그들의 지역사회가 양극화되고, 사회적으로 차별화되고 불평등해지는 과정을 의미함.
Levitas et al.(2007)	사회적 배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임. 자원이나 권리,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 및 거부,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한 사회의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계와 활동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을 포함함. 그것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형평과 사회통합(cohes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 Mathieson et al.(2008), Social Exclusion: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y, pp. 86-87, Levitas et al.(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 21의 내용 수정·보완.

표 2. 사회적 포용의 차원 및 지표 구성

구분	차원	측정 지표	측정 방법	포용 상태
포용 상태 (개인)	경제	객관적 빈곤	- 가구 균등화 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층
	노동	노동시장 참여 상태	- 유급 노동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	유급 노동
	건강	신체 건강 상태	-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없으면서 우울도 보통 이하
		정신 건강 상태	- 우울도	
	주거	물리적 주거 상태	- 적절한 난방 - 적절한 방의 수 - 지상 주택 거주 -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물리적 주거 조건 모두 충족하면서 주거비 부담 30% 이하
주거비 부담		- 임대료가 가구 월소득의 30% 이상인 가구 (자가, 전세는 부담 없는 것으로 봄)		
서비스	서비스 접근성	- 문화시설 접근성 - 교육시설 접근성 - 의료시설 접근성 - 안전시설 접근성 -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 대중교통 접근성	모두 이용하고 있거나 필요하지 않아 이용을 안 하는 경우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구조)	기회의 평등 인식	- 교육 기회 인식 - 취업 기회 인식 - 승진승급 기회 인식	최저 1점~ 최대 5점	
	분배 평등 인식	소득 분배 상태 인식 부(재산) 분배 상태 인식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	여성에 대한 대우 남성에 대한 대우 장애인에 대한 대우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우	*매우 불평등하다(1점)~ 매우 평등하다(5점)	
	법 집행 평등 인식	법 집행의 평등 인식		

자료: 저자 작성

함하고 있다(Gordon et al., 2000; Bradshaw et al., 2000; 김안나, 2007).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소득, 교육, 건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섯째, 교육 영역의 사회적 배제이다. 적절한 교육은 취업 능력 향상을 통해 소득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육 과정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영역은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의 원천 등)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활동, 참여 등을 포함한다(Gordon et al., 2000; Barnes et al., 2002; Burchardt et al., 1999; Bradshaw et al., 2000; 김안나, 2007; 김교성, 노혜진, 2008).

한편 앞서 정리한 사회적 배제의 측정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Estivill (2003), Fraser(2003), ESRC(2004), Levitas et al.(2007) 등이 정의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서는 ‘나쁜 분배’, ‘권력과 자원, 지배적인 가치와 관련된 열등한 지위’, ‘양극화되고 사회적으로 차별화되고 불평등해지는 과정’, ‘사회 전체의 형평’ 등과 같은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배제의 개념들은 사회적 배제의 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과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불평등의 확대는 극빈층의 수가 감소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서 배제

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OECD, 2011). 이에 이 글에서는 배제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차별), 법 집행의 평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즉 결과적 측면과 그러한 상태를 야기하고 야기된 결과를 개선하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배제 상태 진단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영역을 분석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정은, 조미형(2009)에 따르면 교육 영역(교육 수준)은 사회적 배제의 상태(결과적 특성)보다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원인적 특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사회적 포용은 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5개 차원의 사회적 포용 상태와 기회의 평등 인식, 분배의 평등 인식,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인식, 법 집행의 평등 인식 4개 차원의 사회적 포용의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총 9개 차원). 측정 지표는 ‘2019년 사회통합의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3.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 중첩도 및 연관성²⁾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은 사회적 포용 하위 차원들의 중첩도를 통해 보다 총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용의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은 포용의 상태 ‘여부’가 아니라 ‘정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중첩도는 개인의 포용 상태를 측정할 5개 차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5개 차원 중 4~5개 차원에 포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4개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38.2%로 가장 높고, 5개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36.6%로 그다음 순이었다. 한편 다섯 가지 차원 중 1개 차원에도 포용 상태에 있지 않은 비율은 0.8%로 나타났다.

포용 상태의 중첩도에서는 성별, 연령층, 학력, 소득계층, 지역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차원에서 포용 상태에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78.8%이나 여성은 70.9%로 다소 낮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19~34세의 비율이 80.5%인 것에 비해 65세 노인층에서는 40.1%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졸 이상은 4개 이상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87.0%이나 고졸 이하 74.8%, 중졸 이하 38.2%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포용되는 차원의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으며, 중졸 이하에서 포용의 정도가 급격히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4개 이상 차원에 포용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의 150%인 경우는 90.8%가 4개 이상의 차원에 포용되어 있으나,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는 해당 비율이 7.4%에 지나지 않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에서 중상층(상층)으로 응답한 경우는 80.5%이나,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는 42.6%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77.3%), 대도시(74.1%), 농어촌(63.7%) 순으로 포용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용 상태의 중첩도 비율이 가장 높은 4개를 기준으로 하여 4개 미만의 포용 상태가 낮은 집단을 찾아보면 여성, 65세 이상, 중졸 이하,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계층(빈곤층),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중첩되어 나타나기 쉬운 포용의 차원을 살펴보기 위해 각 차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의 포용 상태에서는 경제 차원과 노동 차원의 상관관계수가 0.267, 경제 차원과 건강 차원의 상관관계수가 0.293으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빈곤 상태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양호한 건강 상태와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개인의 포용 상태를 보여 주는 차원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나타

2) 사회적 포용 상태의 중첩도와 연관성을 살펴보는 목적은 포용의 상태가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지(포용 상태인 차원의 개수)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포용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차원 간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중첩되어 나타나기 쉬운 포용의 차원을 찾기 위함이다.

표 3. 개인의 사회적 포용 상태 중첩도

(단위: %)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전체	χ^2
전체		0.8	2.9	6.2	15.3	38.2	36.6	100.0	
성별	남	1.0	2.7	5.1	12.4	35.6	43.2	100.0	84.6633***
	여	0.6	3.0	7.2	18.3	41.0	29.9	100.0	
연령층	19~34세	0.0	0.8	4.2	14.4	45.5	35.0	100.0	450.9307***
	35~64세	0.9	2.3	4.7	13.0	36.6	42.5	100.0	
	65세 이상	2.2	10.3	18.2	29.3	29.6	10.5	100.0	
학력	중졸 이하	2.3	11.0	19.2	29.4	28.1	10.1	100.0	716.6241***
	고졸	0.9	1.7	5.9	16.8	43.2	31.6	100.0	
	대졸 이상	0.2	1.4	2.2	9.3	36.8	50.2	100.0	
객관적 소득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7.4	23.9	35.5	25.9	7.4	0.0	100.0	1988.458***
	50~150%	0.0	0.5	3.3	15.9	43.4	36.9	100.0	
	150% 이상	0.0	0.1	1.1	8.1	37.1	53.7	1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2	13.5	18.6	20.2	26.4	16.2	100.0	636.0686***
	중하층	0.3	2.2	6.3	17.2	39.9	34.2	100.0	
	중간층	0.0	0.8	3.1	12.5	40.8	42.9	100.0	
	중상층(상층)	0.0	0.8	3.2	15.5	32.9	47.6	100.0	
지역	대도시	1.0	3.3	6.7	14.8	35.5	38.6	100.0	51.8305***
	중소도시	0.5	2.1	5.0	15.1	40.9	36.4	100.0	
	농어촌	1.2	5.7	10.5	18.8	36.4	27.3	100.0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났다($r=0.2$ 이하).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 하지만, 개인의 사회적 포용 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포용 상태와 주거나 서비스의 포용 상태는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빈곤 상태일지라도 주거가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상태일 수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차원의 포용 상태

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원들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r=0.3$ 이상). 기회의 평등 인식은 분배의 평등 인식과의 상관계수가 0.342,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 인식과의 상관계수가 0.359, 법 집행의 평등 인식과의 상관계수가 0.418로 나타나 각 인식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배의 평등 인식도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 인식,

표 4. 개인의 사회적 포용 상태 및 인식 간의 상관관계

구분	개인의 포용 상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경제	노동	주거	건강	서비스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
경제	1								
노동	0.267***	1							
주거	0.138***	-0.015	1						
건강	0.293***	0.147***	0.059***	1					
서비스	0.170***	0.044**	0.122***	0.125***	1				
기회의 평등	0.054***	0.014	0.034*	0.046**	0.049**	1			
분배의 평등	0.022	-0.012	-0.027	0.025	-0.034*	0.342***	1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0.025	0.025	0.009	0.007	0.011	0.359***	0.316***	1	
법 집행의 평등	0.010	-0.013	0.000	0.051**	0.005	0.418***	0.339***	0.327***	1

주: 1) *p<0.05, **p<0.01, ***p<0.001.

2) spearman 상관계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법 집행의 평등 인식과 모두 양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r=0.3$ 이상).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의 평등 인식과 법 집행의 평등 인식 상관계수는 0.327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회, 분배,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 법 집행의 평등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분배나 특정 대상에 대한 대우, 법 집행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사회적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포용 상태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설명력은 Adj R-Sq=0.0134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Adj R-Sq=0.06로 약간 증가한다. 이는 개인의 포용 상태보다 구조적 과정에 대한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 수준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개인의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 1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과 교육 수준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통합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고졸인 경우 사회통합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포용 상태 변수 중에는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의 포용

표 5. 사회적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1 (개인의 포용 상태)	모형 2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모형 3 (전체)
성별(여성=0)		-0.14214 *	-0.14727 **	-0.15266 **
연령층 (19~34세=0)	35~64세	-0.0604	-0.11071	-0.11426
	65세 이상	-0.0588	-0.14517	-0.07957
교육 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36927 ***	-0.29709 **	-0.40043 ***
	대졸 이상	0.04174	0.0499	0.01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0)	중하층	-0.10508	0.02719	-0.12349
	중간층	0.0294	0.0274	-0.01932
	중상층(상층)	0.24437	0.10662	0.1146
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09902	-0.08511	-0.10301
	농어촌	0.08946	0.06601	0.08556
개인의 포용 상태	경제	0.19066		0.15294
	노동	0.04695		0.06312
	주거	0.20074 **		0.23856 ***
	건강	0.30517 ***		0.25432 ***
	서비스	0.17589 *		0.16843 *
구조적 포용 과정 인식	기회의 평등		0.06532 ***	0.05912 ***
	분배의 평등		0.01468	0.01947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0.04453 ***	0.04487 ***
	법 집행의 평등		0.27511 ***	0.27789 ***
상수		3.95348 ***	2.66751 ***	2.24688 ***
N		3888		
Adj R-Sq		0.0134	0.06	0.0687

주: 1) *p<0.05, **p<0.01, ***p<0.001.

2) 사회통합 수준은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0~10점으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주거 조건이 충족되고 주거비 부담도 양호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양호한 경우, 문화·교육·의료·안전·생활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그렇지 못한 배제의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구조적 포용 과정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에서도 성별과 교육

수준이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회의 평등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평등 인식, 그리고 법 집행의 평등 인식이 사회통합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포용의 차원을 모두 투입한 모형 3을 보면 모형 1과 모형 2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는 성별과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포용 상태 변수 중에는 주거와 건강, 서비스 차원의 포용 상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 변수 중에는 기회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과 부의 분배 인식보다는 기회가 평등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법 집행이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사회적 포용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포용 상태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포용 상태의 측정은 개인의 포용 상태를 측정하는 5개 차원의 지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4개 차원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포용 상태(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차원의 중첩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평균 5개 차원 중 4개의 차원에 포용 상태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포용 상태 차원이 4개 미만인 집단은 여성, 65세 이상, 중졸 이하,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계층(빈곤층), 주관적 소득계층

을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포용의 각 차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인의 포용 상태 간에는 경제 차원과 노동 차원 및 건강 차원의 상관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포용 상태(비빈곤)가 노동 포용 상태(유급 노동)나 건강 포용 상태(만성질환이 없고 우울하지 않은 상태)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주거 포용 상태(주거의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며 주거비 부담이 없는 상태)나 서비스 포용 상태(문화·교육·의료·안전·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상태)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소득 중심의 대상자 선별 및 지원 방식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포용 차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비빈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거 조건이 열악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을 수 있고,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나 서비스 차원의 포용 증진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각 차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포용의 차원들이 사회통합 인식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의 포용 상태 변수(경제, 노동, 주거, 건강, 서비스 포용 상태)보다는 포용의 구조적 과정 인식

(기회, 분배, 특정 대상, 법 집행의 평등) 변수가 사회통합 인식 수준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 변수가 인식 변수이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일 수 있으나, “사회적 배제는 일종의 불의(injustice)이지만 항상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은 아니며, 나쁜 분배와 인식의 부족이라는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재분배 정책과 인식 관련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프레이저(Fraser)의 주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Fraser, 2003).

또한 개인의 포용 상태를 나타내는 5개 차원 중 사회통합 수준 인식에는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즉, 개인의 빈곤이나 실직, 비취업 등의 상태보다는 열악한 주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등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거, 건강, 서비스 차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이 사회통합 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 중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회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 이전 ‘과정’에서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교성, 노혜진. (2008).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선형모델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 34, 134-162.
- 김문길, 김미곤, 정해식, 곽윤경, 우선희, 이정윤. (발간 예정).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109-133.
- 김안나. (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
- 원재웅, 이재수. (2017). 주거환경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사회자본 형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택학회 2017년 하반기학술대회 자료집. 223-236.
- 이정은, 조미형. (2009). 사회적 배제 집단의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79-103.
- 하성규, 서종녀. (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3), 159-181.
- Barnes, M., Heady, C., Middleton, S.,

- Millar, J., Papadopoulos, F., Room, G., & Tsakoglou, P. (2002).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London: Edward Elgar Publishing Ltd.
- Bradshaw, J. and other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Paper presented for the 26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Poland.
- Burchardt, T., J. Le Grand, and D. Piachaud(BLP).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 Cameron, C. (2006).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3), 396-404.
- 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2004). www.esrc.ac.uk (retrieved August).
- Estivill, J. (2003). Concepts and strategies for combating social exclusion: an overview.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Fraser, N. (2003). Redistribución, reconocimiento y exclusión social. In Departamento Administrativo de Bienestar Social (DABS) & 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Relaciones Internacionales,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eds.) *Inclusión social y nuevas ciudadanía*s.
- Condiciones para la convivencia y seguridad democráticas. Seminario Internacional. Memorias. Bogotá: DABS, PUJ: 55-69.
- Gordon, D., Adelman, L., Ashworth, K., Bradshaw, J., Levitas, R., Middleton, S., Pantazis, C., Patsios, D., Payne, S., Townsend, P. and Williams, J. (2000)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Bristol.
- Mathieson J., Popay J., Enoch E., Escorel S., Hernández M., Johnston H., et al. (2008). Social Exclusion: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y.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background paper 1.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3).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안*. OECD,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